

# “코로나 추경, 민생 추경 되도록”

### 민생당 유성엽 대표, “유류세 인하·보육 지원 등 통해 전 국민 혜택 보도록 3당 원내대표간 협의”

유성엽 민생당 대표(정읍·고창)가 코로나 추경에 대해 대기업·자동차 위주가 아닌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 추경은 11조 7천억 규모로서, 이 중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세제 지원 주요 내용

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이다.

그러나 이 중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은 당장의 코로나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유 대표의 지적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현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급되는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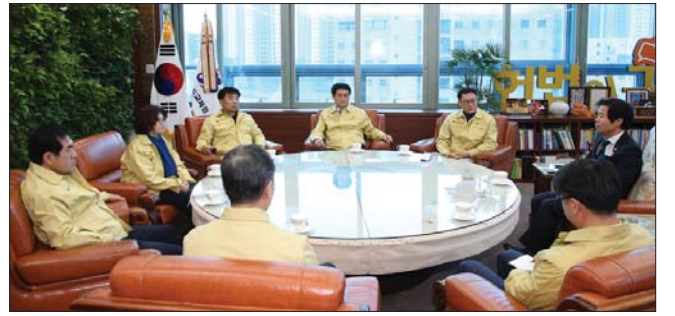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금 확대와 농어민들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0세율 일몰연장 등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대기업 밀어줄 때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낮춰야 할 때”라며,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소세 세수 감소분만큼 유류세를 7% 가량 인하할 경우, 약 3개월 동안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광업계에도 간접 지원이 될 것”이라며 개소세 대신 유류세를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양육수당을 월 50만원까지 상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3당 원내대표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전북도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 “학교 휴업 상황 대비 재난 극복”

### 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방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4일 전북도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대응 현황을 청취한 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도교육청 교육국장 겸 정책공보관, 학교교육과장, 인성건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을 보고받았다.

김국재 교육국장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과의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기 개학이 늦어지는 데 따른 수업일수 대책 마련과 함께 개학 전 E스쿨과 EBS를 통한 온라인 학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전주6) 의원은 “도교육청의 대처에는 교직원들의 노고와 애환이 담겨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방역 대책 수립 및 근무로 인한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학교 휴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보호·관심과 책임이 가중되고 가중된 부분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직원들은 가정 내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 당국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휴업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재난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 靑,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 전환

靑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운영된다.

靑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의 코로나 19 비상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며 “오늘靑와대부터 앞장서서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각부처에 당부한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본의 콘트롤 타워 역할에 더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중대본 체제를 비상방역과 경제에 비장하게 대응하는 범정부 긴급대응 체제로 고조자 한다”며 “모든 정부기관은 더 헌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을 뒷받침하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적 동참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靑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지휘 아래 모든 비서관이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비상회의 이외에도 비서실장 주재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상황대응을 위한 실무 TF도 별도로 운영된다. /뉴시스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여야 3당,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

### “농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돼야... 법 규정 역할”

여야 3당이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민주통합의원외인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

회 로터넬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

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배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가족 방역봉사단 구성

### 코로나19 방역 ‘구슬땀’

### 김중회 국회의원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 김중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4일 ‘가족방역봉사단’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김 의원과 아들·딸로 구성된 ‘가족방역봉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당국의 일손을 돕자는 취지로 거리를 나섰다. ‘가족방역봉사단’은 공용버스터미널과 상가 주변을 돌며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 의원과 가족이 땀을 흘리며 방역에 나서자 김제공용터미널 이용객과 상가 주민들은 크게 환대했다.

‘가족방역봉사단’은 앞으로도 김제·부안 전동시장과 상가 거리를 돌며 방역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 김성주, 코로나19 위기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전주병)가 첫 공약 발표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지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이 순직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며 “전북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식당, 학원, 서비스업 종사자, 프리랜서, 여행 종사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특히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급박한 사람들로부터 생활비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취재반

### 조형철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해야”

민생당 조형철 예비후보(전주)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침체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 후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재난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1천만명 소득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면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사람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경제난국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별취재반

### 김수홍 “대면 선거운동 중단, 코로나19 극복 동참”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예비후보(익산갑)가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수홍 예비후보는 “선거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익산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며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특별취재반

### 조배숙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복구 법령 제정”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익산을)가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와 복구를 위한 법령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낭산 폐기물 문제, 장정마을 문제 등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환경재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에 조기 개입하도록 하는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별취재반

## 정동영, ‘전주시 소득 주간’ 참여

### 코로나19 대응... “정치권도 최선 노력 다할 것”

21대 총선 전주(병)에 출마를 선언한 ‘위기 해결사’ 정동영 예비후보가 4일 전주시 소득 주간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예방에 나섰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IMF이후 최대의 국가비상사태와 민생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와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IMF경제위기를 극복한 국민들의 자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며 “소득주장에 참여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일제 소득주간’을 시작해, 매주 수요일마다 ‘일제 소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지난 3일 21대 총선 전주(병)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4일 팔복사단 앞과 덕진구 송천동 곳곳의 거리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에 함께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문제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삶은 문제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소득주장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처럼 위대한 우리나라 국민은 또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동영 예비후보는 4일 팔복사단 앞과 덕진구 송천동 곳곳의 거리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에 함께 했다.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당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주요 거래처의 생산과 납품 지연, 매출액 감소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과로사로 명명을 달리하신 전주시 공무원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하다”며 “모두 노력해 이번 최대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민주 “검찰, 신천지 적극 수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교단과 관련, 검찰을 향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정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특강·허위 제출한 메타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 등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앞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신천지의 비열

조에 강력 대처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신천지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유착관계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뉴시스